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0호 2014년 11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4년11월 발행(30호)    발행인 표재석    편집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송 성 홍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끝자락에서 전문건설인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일부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예산 축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극심한 일감부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와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없이 건설업으로 몰린 결과, 건설업체 수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경기부양의 효과를 반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극소의 공사물량을 쫓아 또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겼고, 일부업

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는 등, 왜곡된 건설시장 환경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건설한 업체도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추진, 주계약자 낙찰제도의 활성화 부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불법·불공정하도급 관행의 상존 등으로 전문건설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 업계의 지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직시하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4차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도 이런 대외적인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뜻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선두에 서서 전문건설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반이자 국제경쟁의 원동력이므로 국가건설산업의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전문건설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국 4만여 전문건설인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적시하고 이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양질의 건설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갈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인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문건설 혁신역량 강화전략’ 세미나 개최

- ‘전문건설 혁신역량 강화전략’ 세미나가 지난 11월 3일(월)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경영 및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린 것으로,
  -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 신승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협회 회장, 박철기 지방관급건축물공사협회 회장,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임성안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금번 행사에서는 노재화 원장의 개회사,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이 건설기업 생산성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해, 단국대학교 김치경 교수가 IT 융·복합을 통한 전문건설공사 생산성 혁신 방안에 대해, 최평호 영신디앤씨 이사가 자동화 장비기술을 활용한 토공사 생산성 혁신사례에 대해 차례로 주제발표 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 이현수 교수(서울대학교)의 주재아래, 김응일 대표이사(서천건설), 박종문 대표이사(한국강건), 손영진 대표이사(콘스텍), 장현승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훈희 교수(고려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집단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 우리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온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고용포럼 분과위원회' 주제발표

-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한 '건설고용포럼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공공영역에서의) 건설일용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모델 발굴』이란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
- 동 포럼은 건설현장 경력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규 건설근로자의 양성과 기능향상 등을 이끌어 낼 정책대안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사·정·학·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과제 발표, 토론,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 '건설불공정하도급 실태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방안 제시

-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 동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건설업계에 뿌리깊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박 연구위원은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사전적인 불공정행위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공사 입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다.

##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 설명회' 강연

-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지난 11월 4일에 열린 '경남·창원지역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 설명회'에서 『해외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강의 및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 설명회는 해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행사이며, 이번 강의에서 다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해외시장에 국내 대형 건설사와 동반 진출하는 하도급업체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업체들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제도 현장실태점검 TF위원 위촉

- 이종광 연구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제도 현장실태점검 TF위원에 위촉되어 1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과 함께 도입 제도별 거래관행 개선 변화 정도,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례·모범사례 및 관련 건의사항·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동 TF는 하도급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부당한 특약금지)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거래관행이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의 주요 내용

- ①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상습체불업체에 대해 명단 공표 및 시공능력평가시 감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 상습체불업자로 공표시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 ②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의 요청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
- ③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
  -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한 관리 및 공정한 건설시장질서 확립
- ④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기 등록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시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
  - ※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
- ⑤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





## 연구보고서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1996년 12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발주방식의 하나로 2011년 5월, 시공책임형 CM이 건설법에 규정됨에 따라 향후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시행·활성화에 대비한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의 시행 및 활성화에 대비해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계가 동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과 업계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 ①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공책임형 CM 제도 현황, 시장 및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소개
  - ②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요구 방향 도출
  - ③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전문건설업체 스스로가 미리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방안 제안
- 연구결과 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더해 전문건설업체들의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대내·외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① 직접시공 의무 예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② 주계약자방식 등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③ 최저가의 관행 개선 등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